



10월은 노벨상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학상을 필두로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평화상, 문학상 등 각종 노벨상 수상자가 잇따라 발표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상은 역시 평화상이다. 인권운동가나 평화에 공헌한 사람,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정치지도자들이 해마다 평화상을 받아왔다. 역대 평화상 수상자들의 면면을 봐도 한마디로 쟁쟁한 지도자나 단체들이다.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국경없는 의사회 등이 90년 이후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김대중 전대통령도 국력을 쏟아 붓다시피 한 덕택에 2000년에 평화상을 받아 한국인 첫 노벨상 수상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케냐 환경운동가 올 평화상 수상

올해의 노벨 평화상은 아프리카 케냐의 여성 환경운동가인 왕가리 마타이에게 돌아갔다. 케냐의 환경차관인 마타이는 지난 30년 가까이 아프리카에서 3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그린벨트 운동을 이끌어 온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타이는 1901년 노벨평화상이 시상된 이래 아프리카 여성 가운데 최초로, 아프리카인 중에서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2001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1993년)등에 이어 7번째로 평화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체 여성수상자 중에서는 12번째가 된다. 이로써 지난 해 수상자인 이란의 인권변호사 시린 에바디에 이어 여성이 연달아 노벨평화상을 받는 진기록이 세워졌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마타이가 선정된 것은 한편으로는 의외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번 노벨평화상의 의미는 무엇보다 평화활동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정치적 평화활동을 한 인사들에게 주어져 온 노벨평화상이 환경운동가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 창설 100년을 넘기며 정치인 수상 일변도에서 탈피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에게도 문호를 넓히겠다는 노벨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노벨위원회측도 “환경이 노벨평화상의 주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노벨평화상의 지평을 넓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노벨위원회측의 의미 부여와는 달리 노르웨이에서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저

노벨상 받는 한국인 나오길—



이광호 KBS 해설위원

명 인사들은 안보와 평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노벨 평화상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 부각되고 있는 때에 환경 운동가에게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노벨위원회가 중요한 이슈를 비겁하게 비켜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평화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하다는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가 하면 노벨위원회가 탈선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카리 위로치 전 노르웨이 총리는 “환경과 개발에 대한 문제는 테러와도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부유국과 빈곤국의 증오와 대립이 세계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해마다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고 상금은 다른 노벨상과 마찬가지로 천만 스웨덴 크로네, 우리 돈으로 약 16억원이다.

최근 노벨상 수상자 절반이 미국인

노벨상도 미국인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미국 국적이라도 취득하고 유명 대학과 연구소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있어야 유리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수상자를 보면 지난 2000년 노벨상 수상자 13명 가운데 8명, 2001년엔 14명 중 8명, 2002년엔 13명 중 6명, 지난해엔 11명 중 6명 등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을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금년에도 미국의 독주는 계속돼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자 8명 중 6명이 미국인이다. 이쯤 되면 미국이 노벨상을 석권하거나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인 수상자를 대학별로 보면 하버드대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매사추세츠 공대와 캘리포니아 공대가 각각 16명, 스탠퍼드대학과 시카고대학이 각각 15명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내 상위 5개 대학에 과학분야와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몰려있는 셈이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력과 미국대학의 경쟁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의 25% 차지

두뇌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유대인도 노벨상만

큼은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무려 25%가 유대인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국내외의 유대인 인구는 약 1,500만명, 세계 인구 60억명 가운데 0.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4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가 노벨상 수상자의 4분의 1을 차지한 셈이다. 그저 경탄할 뿐이다. 우리의 이웃 일본만 해도 과학 분야에서 벌써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과학분야 수상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저 부럽고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사회에서 이공계 위기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과학분야 수상자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아닐까. 현재와 같은 한국 시스템으로서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 평화상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상은 고도의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생의 노력으로 연구한 결과가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을 경우 상을 받을 수 있다.

창의성·독창성 살려야 수상 가능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왜곡된 평등주의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상상력을 키우고 두뇌를 담금질해야 할 영재들이 지식 암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그 동안 술한 교육개혁과 대입제도 변경은 학습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하향평준화로 이어져 구조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제도 하에 학생들을 가두어버렸다.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온정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대학 풍토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독창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최고 과학자 10명을 선정해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OECD에 들어간 우리의 국력으로 봐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학자들의 분발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